

여야정 “민생 입법 · 예산에 초당적 협력”

문 대통령-여야 5당 원내대표, 상설협의체서 합의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 규제혁신법 적극 추진
이동수당법 신속개정 합의 · 선거연령 18세 인하 논의
한반도 비핵화 · 평화체제 위해 초당적 협력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경제 · 민생과 관련된 입법 ·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회의 직후 춘추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정은 우선 경제 ·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처리 및 예산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여야정은 채용공정 실현과 노사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취업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법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

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의 보완입법 조치를 마무리하며, 일자리 창출과 노사 간 새로운 협력 모델인 '공주형 일자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정은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을 긍정 평가하면서 경제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추가적인 규제혁신 관련법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법 등의 처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정은 또 지방분권과 지역활력을 높이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지방과 수도권 상생과 발전, 국가 균형발전, 지역주도형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이와 관련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여야정은 불법촬영물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국민안전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강서 PC방 살인사건 대책을 위한 후속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열린 제1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 대변인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법안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고, 수혜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이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여야정은 또 한미 간 튼튼한 동맹과 공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남북 국회회담의 조속 개최를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

하기로 했다. 선거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 기술력과 원전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 ·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를 확대 적용한다는 것과, 경제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반대했다는 의견을 덧붙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합의문 발표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이양수 자유한국당 · 김삼화 바른미래당 · 최경환 민주평화당 ·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표가 각각 합의문 조항을 번갈아가며 낭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합의문 발표 직후 “역사적인 날을 기록하자”며 5당 원내대변인들에게 기념사진 촬영을 제안했다. /뉴시스

‘음주운전’ 이용주 징계? 평화당 “7일 결론 가능성”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사진)의 징계 수위가 이르면 7일 결정된다.



장철우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장은 5일 국회에서 진행된 이 의원 징계 수위를 논의하기 위한 당기윤리심판원 첫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7일 징계 수위가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31일 오후 10시 55분께 올림픽대로 동호대교에서 잠시 방황으로 가는 차량 중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 면허 정지 수준이다. 특히 이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운창호법’ 발의에 참여한 적이 있어 논란이 됐다. /뉴시스

홍영표, 리선권 ‘냉면’ 발언에 “큰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야당이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냉면’ 발언 등을 문제 삼는 것과 관련해 “큰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관련 브리핑을 열어 “평양 방문은 정말 거기 갔던 모든 사람들이 극진한 환대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경제인들도 특별대우를 받았다고 대부분 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의 리 위원장 냉면 발언 관련 항의 여부에 대해 “거기서는 없었다”고 했다. 이어 “남북 간 대화와 사실 잘 진행되고 있다”며 “민약 냉면 발언이 사실 있었다면 정말 무례하고 우리가 사과를 받아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저로서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남북관계를 해치는 무례한 발언이러든지 잘못된 발언 같은 것이 있으면 당당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한편, 리 위원장은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방북한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복귀용으로 넘어가느냐’고 말한 사실이 국정감사 기간 야당의 질의로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뉴시스

행감 · 본예산 심사에 대비한다

도의회 행자위, 8일 개회 정례회 앞두고 의원 연찬회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주영)는 오는 8일부터 개최하는 2018년도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및 2019

년도 본예산안 심사 대비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5일부터 2일간 부안에서 내실 있는 의원 연찬회를 실시한다.



5일부터 이틀간 부안에서 열리는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연찬회.

이번 연찬회 기간에 행자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의 분야별 질의방향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분석 및 토론을 벌이고 있다. 또한 내년 본예산 심사를 위해 실국별 신규 사업 및 주요 예산 편성현황을 청취하는 한편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않았는지 세심하게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의정역량을 한층 강화하여 잘못된 행정이 있다면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도민들의 열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내년 본예산안에 대해 철저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김진성 기자

김동연 “일자리예산은 사회적 대타협 전제조건”

예산 삭감 야당 겨냥… “오히려 조금 더 재원 투자했으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5일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일자리예산 23조5000억원과 관련, 대폭 삭감하려는 야당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오히려 조금 더 재원 투자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일자리 예산은 “앞으로 고용의 신속성 · 유연성 확보 등 사회적 대타협의 전제조건으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자리예산 중 10조 가량은

실업급여 등 고용안정성을 위해서 주는 돈”이라며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예산이라고 봐도 어렵지 않다”고 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와 관련, “당초 과표 양성화 취지로 도입했는데 일몰도 검토가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국민들이 이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급속한 공제 축소는 신중해야 하지 않나 한다”라고 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번에 시행된 유류세 인하 과정에서 등유가 대상에서 빠진 데 대신 “저소득층 난방의 중요한 축”이라며 “지금도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추가지원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